

# 통일 이후 남북한 농업관리조직 통합방안

## Integration Scheme for Agricultural Govern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최윤상<sup>1</sup>

Youn Sang Choi  
 대진대학교  
 국제학부

신용광<sup>2\*</sup>

Yong Kwang Shin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농수산융합학부

<sup>1</sup>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Daejin University, Pocheon 11159, Korea

<sup>2</sup>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Convergenc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Jeonju 54874, Korea

###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integration scheme for agricultural govern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after unific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ir current agricultural governance, assuming drastic changes of economic system in integration process after unification. The North Korea's critical food shortage will force reformation of its agricultural governance to be the top priority in integration process after unification. The agricultural governance of South and North Korea has comparable structures. However, the North Korea's agricultural governance is extremely inefficient because it is established for political purposes. The integration scheme suggested includes expansion of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tegration of research institutes, establishment of branch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transformation of existing North Korea's organization into South Korea's system and preparation of training programs for North Korea's officials.

**Key Words :** Unification, South Korea, North Korea, Agriculture, Organization, Integration, Extension

Received May 15, 2023  
 Revised June 10, 2023  
 Accept June 28, 2023

\*Correspondence  
 Yong Kwang Shin  
 ykshin22@korea.kr

### 서론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부족 국가이다. 60만 명에서 최대 100만 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1990년대 대기근을 겪은 이후에도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은 국가가 제공하는 식량 배급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대기근으로 배급이 붕괴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식량을 시장을 통해 조달해 오고 있다.

2019년 FAO와 WFP에서 발간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는 북한 인구의 40%가 식량부족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지만, 2022년, 미국 농무부는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22~2032'에서 전체 북한 주민의 68.6%가 식량 부족을 겪는 것으로 추정하고 예멘, 몽골과 함께 북한을 아시아 내 최대 식량부족 국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가 현재 심각한 수준일 뿐만 아니라 현재진행형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때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는 최우



선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초기의 원활한 통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통일의 사례를 살펴봐도 동독지역도 통일 직후 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변혁으로 식량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동독지역은 통일 이전 동구권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수준이었음에도 통일 직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식량부족 현상으로 인해 서독 지역으로부터의 식량 공급에 의존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인 동독지역의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해 통일독일 정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

동독지역의 식량 생산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체제 전환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주의 농업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 문제와 농업생산에서의 고질적인 저생산성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총체적인 구조적 개선을 통해서 해결되었다. 식량 공급에서 큰 문제가 없었던 동독과는 달리, 심각한 식량부족을 안고 있는 북한의 경우 통일 이후 체제 전환과정에서 식량 문제는 더 악화될 경우 통일 정부는 식량문제의 해결 없이는 통합 과정의 진행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식량문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가 안고 있는 농업관리·생산조직 및 생산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외 봉쇄에 따른 외부 도입량의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농업 부문의 구조적 개선이 우선적으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일 이후 농업 부문의 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의 식량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남북 농업의 통합이 조화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에 남북한 농업관리조직의 개편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남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을 가정한 급격한 경제체제 변혁 과정에서 남북한 농업 부문의 농업관리조직 통합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남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을 살펴보고, 두 조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 선행연구

현재까지 대부분의 남북한 통합연구는 국가 통합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농업 부문에 관한 연구도 농업 일반, 농업 협력 방안, 독일 통일에서의 시사점 등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 농업 부문의 후진성과 심각한 식량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통일 이후 농업관리체제 통합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련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창곤 외(1998)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북한 유통정책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북한의 상업조직, 상품 유통경로, 상업 및 유통 형태, 상업 단위, 상품가격 등을 포함한 상업 유통체제와 농산물의 분배관리체제 및 암시장을 포함한 비공식적 유통실태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농산물 유통체제의 확립방안을 제시하였다. 남한 주도의 급변 통일 직후 예상되는 문제로 식량 공급 부족과 공식적인 유통체제의 마비 현상으로 보았다.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 식량 확보, 식량 수송, 식량 배급 및 자재공급을 포함한 비상식량 수급계획의 수립, 긴급수송 및 창고·보관시설 건설계획의 수립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유통체제 마비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농민 시장의 확대를 통한 시장기능의 활성화, 정부 주도하에서 식량 및 부족자원 배급과 시장경제 활성화의 이원화된 수급 및 가격정책, 장기적으로는 북한지역의 농산물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제안하였다.

김운근(2000)은 북한의 농업기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 가능성을 파악하여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한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북한 농업기반 실태와 농업개발 협력 방안에서 농자재 지원을 통한 북한의 식량안보 능력 향상과 시범농업개발모델 지역을 선정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비용 부담과 위험 분산을 위하여 국제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도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또한 북한에 대한 농업개발 협력사업 추진 목적을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고, 남북한 상호 보완적인 농업 협력체제 구축, 그리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전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농업 협력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부응하여 남북한간 농업 협력은 종전의 민간 차원의 협력은 계속하되 정부 차원의 대규모 농업개발 협력사업으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일영(2004)은 사회주의 농업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북한 농업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북한의 농업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아울러 중국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권 농업개혁의 경험과 북한 농업 문제를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의 농업의 현주소와 과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북한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 하에 형성된 집권적 농업 시스템의 구성요소를 농업 집단화, 유통의 국가독점과 저농산물 가격, 그리고 전통적 집약농법의 3요소로 규정하였다.

북한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농업 부문이 급속한 중공업화를 위한 주요한 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요소 가격, 생산재 가격, 소비재 가격을 억압하는

거시정책, 고도로 집중된 자원 배분제도, 국가계획에 의해 통제되는 미시 경영 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소비재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저농산물 가격정책이 시행되었으며, 농촌·농업 부문에서 형성된 잉여를 국가가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획수매·계획배급 제도와 집단 농장 체제가 수립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통적 집약농법을 강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최수영(2002)은 북한 농업정책의 변화를 농업정책의 변화 방향, 북한이 추진해 온 농업 관련 법·제도의 변화, 농업 구조개선 및 농업 기반 조성 등을 통해 살펴보고, 북한의 곡물 수급 동향과 농업 생산성 제약요인을 검토한 후 농업 개발 전략과 남북한 농업 협력 추진 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였다. 북한의 농업현황에 기초하여, 북한은 생산에 기초한 전략에 따라 농업증산을 이루는 한편, 무역에 기초한 전략에 따라 수출지향적 산업의 성장을 통해 농업 부문이 필요로 하는 투입물과 부족한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남북한 농업 협력은 북한 농업의 자생력 강화와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북한 농업 협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지원을 우선 하면서 북한 농업 부문에 대한 종자, 영농자재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기적으로는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기술에 의한 농업 공동생산을 통해 상호이익을 창출해 나간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농업 개혁 촉진과 통일시 북한의 시장경제 적응을 위한 농업 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권태진 외(2007) 등은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 추진방안에서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농업개발 지원으로 전환하고자 남북한이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재원 조달 방법, 개발 협력을 위한 법률 정비 등 제도 정비, 개발 협력 항목의 선정 등 많은 문제가 내재하여 있으나, 국제금융기구의 이용, 개별 프로젝트 중심의 개발 협력에서 프로그램 중심으로의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원의 제약을 감안하여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의 여러 가지 가능한 사업 중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과 나중에 추진해도 좋을 사업으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하였다. 또한 개발 협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필요한 제도의 구축이라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개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정비도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원의 제약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농업개발

협력사업의 관련 부처인 농림부의 예산을 함께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북한의 농업관리조직

### 북한 농업관련 입법기관

#### 최고인민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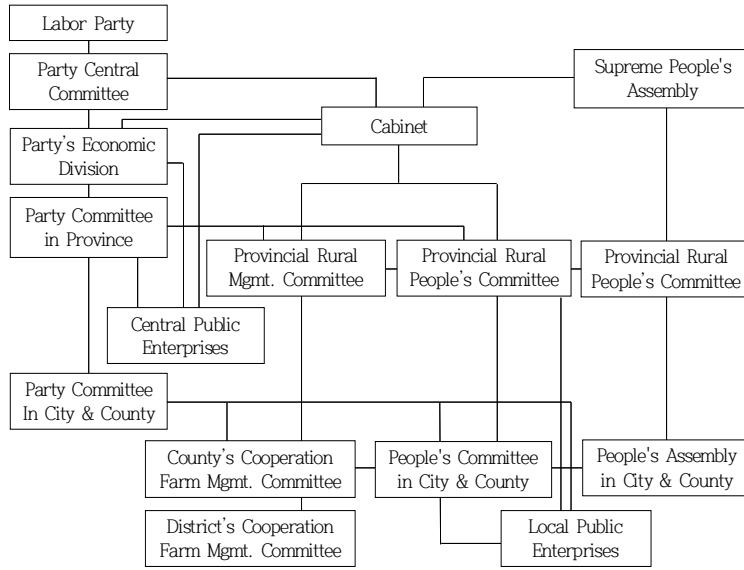
실북한의 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에 대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 주권 기관(우리의 국회에 해당)이며, 최고인민회의의 휴회 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우리의 국회의원에 해당) 임기는 5년이며, 정기회의는 1년에 1~2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 전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대의원은 인구 3만명당 1명씩 선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인민 경제발전과 국가 예산에 대해 심의·승인하며, 필요에 따라 내각과 중앙기관들의 사업 정형을 보고 받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이 밖에도 조약의 비준, 폐기에 대한 결정권도 갖는다.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정책과 법안의 작성, 심의 및 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와 같은 부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최고 주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위원장의 지도와 노동당의 감독·조정을 받아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력 기구에 지나지 않으며, 회의도 1년에 1~2회 열리며 회기가 2~3일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정 논의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는 도(직할시)·시(구역)·군 단위에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들로 구성되는 지방주권기관으로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인민회의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방의 인민 경제발전 계획과 그 실행 정책 및 지방에 산과 그 집행 정책에 대한 보고의 심의·승인
- ②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 수립
- ③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과 해당 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에 대한 선거 또는 소환
- ④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 폐지 지방인민회의도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회의의 소집과 회의 성립·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최고인민회의와 비슷하다.



자료: 통일부(1999)

Fig. 1. Agricultural governance of North Korea

## 북한 농업관련 행정기관

### 농업성

북한은 1998년 9월 내각 개편을 통해 내각의 부처 중 농업 부문을 담당하는 농업위원회를 농업성으로 개편하였다. 현재 농업성은 국영 농목장과 협동농장 부문을 관장하고 있다. 농업성은 농업 부문을 종합적으로 지휘·감독하며 농업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농장에서 올라오는 연간 생산 계획에 대한 조정·관리, 그리고 농업 부문에 대한 정부 지원의 조정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농업성은 직접적으로 농업기술 발전 방향과 농촌경영관리 등 중대한 농업과학 연구 사업, 농업 핵심 간부 양성사업, 대규모 농업 관련 사업 등을 책임지며, 생산기술 지도, 농업 자재 및 농기계 보급대책의 수립 등 농업 부문 전반에 대해 지도한다. 또한 농무성은 농산물 수출지원과 무역회사를 통한 농업 기자재 및 장비의 수입도 책임지고 있다.

농업성에는 1명의 장관과 여러 명의 차관이 있다. 차관들은 정책운영과 지역관리업무는 공유하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책임권이 주어진 고유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농무성은 농업생산국, 과수국, 양잠국, 축산국, 수의국, 토지관리국, 관개국, 종자공급국, 농자재국, 과학기술지원국, 기계화국, 기획국, 노동국, 재무국, 경영국, 해외협력국, 국영농목장국, 농산물무역회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인민위원회

도(직할시), 시(구역), 군 인민위원회는 지방 주권 기관이며, 행정적 집행기관이다. 과거에는 지방인민위원회 위원장을 지방당 책임 비서가 겸직하였으나 현재는 지방 당은 정치철, 지방인민위원회는 집행 업무를 관리함으로써 정치와 행정을 분리시켰다. 이로 인해 당의 직접적 통제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지방 행정체계가 자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정무원이 지방인민위원회나 행정경제 위원회를 직접 통제하지 못했으나 현재에는 내각이 지방인민위원회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인민회의의 소집 및 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사업
- ②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회의의 인민위원회, 내각과 내각위원회, 성의 법령, 정령, 결정 지시 집행
- ③ 해당 지방의 행정사업 조직 집행
- ④ 지방의 인민 경제발전 계획 작성 실행
- ⑤ 지방예산의 편성 집행
- ⑥ 해당 지방의 사회질서 유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와 이익 보호, 국민의 권리보장 대책 수립
- ⑦ 해당 지방의 국가관리 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률 통제사업 실시
- ⑧ 하급 인민위원회에 대한 사업지도 및 하급 인민위원회의 잘못된 결정·집행 정지 등의 임무와 권한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원회의와 상무회의, 비상설 부분 위원회를 운영하며, 자기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며, 상급 인민위원회와 내각에 복종한다

## 북한 농업관련 생산기관 및 조직

### 농업관리체계 개요

북한의 농업 부문 관리와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농업관리체계는 내각의 농업성, 도농촌경리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로 일원화되어 있으며, 기본 생산 단위로는 협동농장과 국영 농목장 등이 있다. 국영 농목장, 국영 농기계 작업소, 국영 관개관리소 등은 소유형태가 국가로 되어있고, 리 단위의 협동농장은 농장 구성원 협동의 소유이다.

농업성은 북한의 농업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농업 부문의 전반적 지도와 농업발전 방향 수립 및 농촌개발 업무를 관장하며,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국영 농목장 등 도내 농촌사업계획 작성, 생산, 기술지도,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 영농자재 수급, 농업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도 단위 농업관리기관이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관리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구로서, 군내 기술 집단, 농기구공장, 농기계 작업소, 관개관리소, 토지건설사업소 등을 산하에 두고 협동농장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지역 농업관리기관

북한은 1962년 10월에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와 국영 농목장 등 농업 부문을 전반적으로 지도, 관리할 목적으로 도 농촌경리위원회를 신설하였다. 도 농촌경리위원회는 농업성의 결정 사항을 하달, 실천하고, 책임지는 기구로서, 그 임무를 살펴보면 농촌사업에 대한 계획서 작성의 지도, 농업생산과 기술지도, 국가계획위원회로부터의 직접적인 영농자재의 수령 및 공급, 도내 농업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맡고 있다. 조직은 도, 군의 협동농장에 대한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등이 있다.

1961년 12월 12일 내각결정 제157호에 의거하여 종래의 군 인민위원회에서 농촌경리부를 분리시켜 군 단위 국가 농업지도기관으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기구는 종래에는 국영 또는 국가 소유였던 농기계 작업소, 관개관리소, 농기구공장, 종자관리소, 수의방역소, 토지건설사업소, 종란장, 종급장, 배합 먹이 공장, 농사시험장 등을 흡수하여 협동농장의 영농을 지도하는 말단 국가 농업지도기관으로 재편되었다.

1962년 말부터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농촌경리의 말단단위로 하여 이를 도 농촌경리위원회와 중앙의 내각 농업

성과 일원적으로 연결시켰다. 전문적 농업지도기관이며 농업 기업소의 성격을 가진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군내 협동농장 및 농업 부문의 국가 기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한다.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기계 작업소, 농기계 공장, 관개관리소, 자재 공급소, 가축방역소 등의 운영, 협동농장의 계획화 사업에 대한 지도 및 지원, 농업생산에 선진적인 기술도입 및 지도, 협동농장의 노동 행정, 재정부기, 경영활동 지도, 영농자재 공급, 군 전체 농업발전계획의 작성, 농업기술 혁명, 토지개간 및 정리, 농촌건설사업의 체계적인 진행을 그 역할로 하는 전문적인 농업지도 기관이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행정구역상 리 단위에 1개소씩 조직되어 있다. 리 협동농장관리위원회는 경제단위인 동시에 행정단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관리위원장이 리 인민위원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 단위 협동농장은 교육, 문화, 후생 등을 총괄하고 있는 기본단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협동농장들은 생산 목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을 상급 지도기관인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통제와 지시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 농업과학원

북한 내각에서 경제 관련 부서는 위원회·성 등의 각 행정부서로 독립 세분화 되어 있다. 과학기술 부문은 각 행정부서내의 위원회·성별로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각종 생산 및 운용 분야의 기술 지도는 물론 품질 감독,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국가계획위원회의 과학기술계획처는 내각에서의 과학기술 계획부서로서 당에서 결정한 정책이나 방침을 보다 세분화하고 구체화하여 각 행정부서의 기술 지도국이나 처로 전달한다. 각 위원회·성의 기술 지도국이나 처에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생산기술지도와 산하 연구소의 연구계획, 기술발전 전망계획 등을 수립하게 된다. 과학원은 국가의 기술정책에 의거하여 산하 연구기관에 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외국과의 과학연구 교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7 과학자, 기술자 돌격대'를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등 생산 현장 기술지도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농업과학과 기술을 연구하고 발달시키기 위하여 여러 개의 연구기관과 농과계 대학들을 많이 설치하였다. 현재는 북한의 모든 연구기관을 통괄하고 있는 국가과학원 내 4개 전문과학원 중의 하나인 농업과학원이 농업과학 관계 연구조직들을 모두 거느리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1952년 3월 농업성 중앙농업연구소와 과학원 농업연구소가 통합되어 농업연과학원으로 발족하였으며, 1958년 8월에는 농업과학위원회로 되었다가 1963년 8월 다시 농업과학원으로

개편되었다. 이후 농업과학원은 1994년 2월 과학원 확대 개편 시 과학원 산하기관이 되었다가 1998년 9월 내각 개편 시 과학원에서 분리되어 농업성 산하 연구기관으로 되었다.

농업과학원의 약 20,000명 직원 중 과학자 수는 5,000여 명, 이 들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약 5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업과학원은 주요 농업생태 지역에 따라 4~18개의 분원을 두고 있으며 산하에 전문연구소가 있다(청진-북동, 혜산-북부, 원산-동부, 청단-남부). 농업과학원의 기구로는 3실·6처·5국의 기술·행정부서가 있고 산하에 직할 연구소, 18개의 지방분원, 1개의 종합시험장과 5개의 전문시험장 그리고 원종장과 수의약품 종합제조소, 자재 상사, 설계사업소가 있다. 농업과학원의 본원과 그 산하 9개의 연구소가 평양에 있고, 나머지는 각도에 분포되어 있다. 연구기관 중 중요한 작물인 벼, 옥수수, 채소 연구를 위하여 평양 근교에 벼 연구소, 강냉이연구소, 남새과학연구소를 설치 운영 중이다.

### 협동농장의 조직과 구조

협동농장은 토지 등의 생산수단이 협동농장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협동적 소유제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과 농업협동조합 기준규약에는 "협동농장의 재산은 협동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공동 소유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화된 협동농장의 효율적 관리와 국가에서 하달하는 생산계획의 완수를 위해 관리조직과 여러 내부 노동조직을 두고 있다. 당과 농업위원회의 농업정책과 지도 방침을 협동농장의 하부 생산 단위까지 전달하고 생산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관으로 총회, 협동농장관리위원회, 검사 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다양한 생산 부문의 관리, 합리적인 노동 배치, 사회주의 집단생활의 촉진을 위해 작업반, 분조를 두고 있다.

협동농장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은 농장원 총회로 대표자 회라고도 하며, 협동농장의 모든 구성원으로 조직된다. 총회는 1년에 4번 분기마다 개최하며, 농장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소집한다. 총회의 주요 임무는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2인 이상의 부위원장 선출, 연간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도별 최종 작업공수 계산과 현금 결산에 대한 비준 등이다. 농장원 총회에서 토의 의결한 사항은 모든 농장원과 관리위원회 지도자가 무조건 이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관리위원회는 협동농장의 전반적인 관리 운영을 총회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리 당 위원회의 지도에 따라 농장의 경영활동과 생산활동을 조직, 집행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장관리와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국가생산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의 직제를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직능을 구체화하고 있다. 관리위원회는 1~2년의 임기로 선거된 15~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여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사장, 창고장, 노동통계원, 부기장, 계획통계원, 관개 담당원, 축산기사, 농업 기사, 작업점 통계원, 생활 지도원 등이 포함된다. 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이 농업 생산활동의 지원만이 아니라 주민행정과 생활보장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협동농장이 생산 단위인 동시에 행정단위임을 보여 주고 있다. 검사위원회는 협동농장에 부과된 국가의 의무 사항, 농장의 재산관리와 재정관리, 노력 관리 등을 월별, 분기별로 검열하는 기관으로 5~15명 정도의 검사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2년이다.

분조는 협동농장의 최말단 기층조직으로 작업반 내의 생산 및 노동조직으로 편성되거나 특별한 경우 농장에 직속하는 형식으로 조직되며, 토지 등 생산수단과 노동 인력이 고정 배치된다.

### 남한의 농업관리조직

남한의 농업관리조직을 살펴보면, 입법기관인 국회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을 포함한 하부 기관 그리고 농업생산 현장의 생산조직인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입법기관인 국회는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며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 통제 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담당한다. 농업관리조직에서 국회의 역할은 농업관리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중앙정부의 국회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의회가 존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의결 기관인 지방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의회의 결정 사항이 집행기관에 의하여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가를 감독, 확인하는 행정감사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조직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농산·축산, 식량·농지·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촌개발 및 농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 부처이다. 기본적인 업무 목표로는 대한민국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업, 축산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 축산업

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진흥 및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을 내세우고 있다. 식품이지만 수산물과 수산업은 해양수산부에서 담당한다. 주요 소관 사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통상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농업관리조직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은 국가 단위의 농업관리사업을 기획하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세 번째 조직은 농촌진흥청으로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및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수련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이다. 주요 소관 사무는 농촌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개발 및 보급, 농식품산업 발전 연구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지도·양성과 농촌지도자의 훈련이다. 농업관리조직에서 농촌진흥청의 역할은 농업생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기획 및 시행하고 기술을 개발 및 보급할 뿐만 아니라 농업관리 담당자와 농업인을 교육·훈련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촌진흥청 산하에는 농업 분야별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시험·연구개발하는 과학원인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그리고 국립축산과학원이 존재한다.

국립농업과학원은 농업환경, 농촌자원, 생물자원, 농산물 안전성, 농업용 에너지 및 생산 자동화, 농업 관련 유용 유전자 개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농업유전자원 이용관리, 한식 세계화, 전통 식품 산업화 등에 관한 시험·연구와 원원잠종의 생산과 보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식량작물, 사료작물, 풋기름작물, 바이오 에너지작물 등의 품종 개량, 재배법 개선, 생산환경 및 품질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채소, 과수, 화훼, 인삼, 약초 및 버섯류 분야의 품종개발, 유전육종 기술, 유전자원 관리·종묘 생산, 재배법 개선, 토양·병해충·기상 등의 환경 관리 및 재해경감, 재배시설의 구조·자재·기구 등의 개발, 원예 및 특작 산물의 품질평가·보전·이용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은 가축·가금(家禽) 및 반려동물(伴侶動物: 애완동물 등)의 유전육종·품종 개량·영양 생리와 사양(기르기)·사료 개발·유전자원 관리, 축산물의 품질·가공·안전성, 초지 조성, 사료 자원의 육종 재배·이용 및 축산환경에 관한 시험·연구와 기술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네 번째 조직은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농어업 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농수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학생 등의 교육 훈련, 학생의 연수 및 졸업생의 영농·영어 정착 지원 그리고 산학협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다. 농업관리조직에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역할은 농촌지역 및 농업생산을 주도하는 전문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섯 번째 조직은 각 도의 농업 진흥과 기술 개발 등을 위해 도청 산하에 설치된 직속 기관인 농업기술원이다. 주요 업무는 농업인 교육 및 인력 양성, 농산물의 생산·저장·이용·가공 관련 기술 시험·연구, 과학적 영농기술 보급 및 농기계 교육, 농업경영 및 농업정보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 농업의 개발과 농촌 생활환경 개선지도, 농업인의 부업 훈련 및 취업 알선, 그리고 기타 농업·농촌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이다. 농업관리조직에서 농업기술원은 해당 도 단위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의 개발 및 지도, 지역 농업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여섯 번째 조직은 농업기술센터로 농업 관련 계몽지도, 농업기술 및 정보 보급, 그리고 농업기술 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이며,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지도사업, 교육훈련, 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며, 농업관리조직에서 시/군 단위에서 지역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지도·훈련하고 지역 농업인을 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마지막 조직은 작목반으로 거주 지역 또는 경지 집단별로 동일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 협동을 통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농산물산지유통의 핵심 조직이다. 농업인 구성원 간의 협동으로 재배 기술 공유, 정보교환, 공동작업, 시설의 공동이용,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의 활동을 한다. 즉, 영농의 과학화와 농업경영비 절감 및 농산물 유통 개선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려는 농업인들의 품목별 협동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목반장, 부반장 또는 총무, 작업·판매·구매·기술 조장 등을 두어 조장을 중심으로 작업을 해나간다.

## 남북한 농업관리조직 비교 및 통합방안

### 남북한 농업관리조직 비교

남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을 비교해 보면, 아래 <표 1>에서 보듯이,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외형적으로는 매우 체계적인 정치적 조직과 행정적 조직의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농업 부문에서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못하고 모든 농업행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있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 행정 체계의 비효율성은 농업 부문의 관리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게 가로막음으로써 현재 식량문제를 포함 하여 북한이 안고 있는 농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통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북통일이 급격히 진행될 때 북한지역 농업행정의 후진성은 결국 농업 부문 통합 과정, 나아가서는 총체적인 남북한 통합 과정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는 장애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표 1〉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은 구조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의 농업관리조직은 지난 반세기 동안 농업 부문의 성장과 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조직의 설립목적에 부합된

기능을 수행해 왔다. 반면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조직은 농업 부문의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업관리를 통해 농업 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행정 조직의 기능과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남북한 농업관리조직의 구조적 공통점을 활용하여 북한의 조직이 농업관리조직으로서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통합이 진행될 때 농업관리조직의 통합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독일 등 다른 체제전환국의 사례를 볼 때, 단순 조직의 통합만으로는 성공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즉, 통일 이후 행정조직의 통합은 단순한 조직체계의 통합을 넘어서 인적 관리에서의 개선 등 많은 해결과제가 존재한다.

**Table 1. Comparison of Agricultural Governance in South and North Korea**

	South Korea	North Korea
Parliament	• National Assembly	• Supreme People's Assembly
Executive Departments	•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 Ministry of Agriculture
Local Legislature & Administration	• Local Governments - Local Legislatures - Local Administration	• Provincial People's Committee
Extension Agencies	•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 •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 Provincial Rural Administrative Committee • Provincial Administrative Committee of Cooperative farm
Production Organization	• Agricultural Cooperative Unit	• Working Party • Division
Research/Support Center	•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 National Institute of Animal Science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남북한 농업관리조직 통합방안

독일통일의 사례를 보면, 농업 부문 통합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부분은 농업 부문 체계의 차이점과 동독지역 체제 및 담당 공무원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효율적인 자본주의 방식의 체제를 구축하는 부분이었다. 특히, 농업생산력, 식량문제 등 통일 당시 동독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농업 부문 조직의

차이와 북한지역 농업조직의 비효율성은 통합 과정에서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심각한 식량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통합이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빨리 북한지역 내 자본주의식 효율적인 농업관리체제의 구축은 통합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이다.

농업관리체제의 통합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북한 농업관리조직의 비효율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조직



자체의 문제임과 동시에 그 조직에서 일하는 직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통합방안은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하였다. 단 농업관리조직의 상위조직인 의회와 내각의 경우는 통일 정부가 구성될 경우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제외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남한의 농업관리조직 중 농촌 및 농업 현장에서 시행되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통일 이후에 북한지역까지 사업을 확대해서 한반도 전체의 농업관리의 실질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는 농촌진흥청을 대체할 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남한에도 농업관리 부문에서 농촌진흥청의 경험과 시스템을 대체할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 농촌진흥청을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구축하는 것은 오히려 농업 부문의 통합과정을 크게 지체시키는 결과만 낳을 것이다.

두 번째로 북한의 농업과학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에 편입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북한지역에 위치한 농업과학원 조직과 시설은 북한지역의 농업에 특화된 분원(예, 국립원예특작연구소의 사과연구소, 배연구소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 된다. 단, 독일 통일 과정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 이상의 조직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과정에서 많은 조직이 축소·통합·폐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연구조직과 시설을 전문성, 지역의 요구 등을 기초로 평가하여 일부 시설은 통합하고 일부 시설은 폐쇄하여 북한지역 농업연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로 북한의 농촌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통일 이후 집단적 농업경영시스템(협동농장 시스템)이 붕괴하면서, 가족농과 대규모 농업 경영체의 창업이 많이 증가하였다. 통일독일에서는 협동농장이 해체된 이후 1998년까지 전체 농업경영체 수의 81%가 가족농일 만큼 가족농 창업은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30년 이상 지속된 집단적 농업경영의 영향으로 2001년에도 개인농이나 협업농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 경영체인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전체 농경지의 50% 이상을 차지함.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도 발생할 이러한 변화는 북한지역에 전문 농어업경영인의 수요를 많이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한국 농수산대학교 분교를 설치하여 북한지역에서 필요한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 북한의 기존 농업관리조직 중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농업기술원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의 농업관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새로운 농정당국의 등장은 기존의 역할, 임무 및 기능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 변화과정에서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던 조직의 체계와 담당자의 변화는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농업관리조직의 통합은 북한의 담당 직원에 대한 강도 높은 훈련프로그램 없이는 불가능하다. 새 부임지에서의 현장훈련, 남한 연관 부처에서의 실용적 훈련, 단기 특별훈련 과정 등의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통일독일의 경우, 새 행정체제 하에서 동독의 직원들이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채용된 동독인들은 서독농업정책과 공동농업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기인한 경제적 또는 행정적 이유로 많은 훈련프로그램들이 실시되어야만 했다. 북한 농업관리조직의 담당 직원들도 전문경력 측면에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지역의 새로운 농업관리체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독일의 경우 동독 직원은 전문경력 문제 이외에도 사회주의 시절 개인기록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사회주의 시절 개인기록의 문제점으로 통합 과정에서 통합 사회주의당 전직 고위 간부 및 직원(해산된 첩보기관의 비공식 부역자 포함)의 공직 복귀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통일 독일 정부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동독인들 모두는 신원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했고 전직 비밀 요원이 아니었음을 검증받아야 했다. 이러한 검증은 직원 채용 과정을 더디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행정 체제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했다. 따라서 북한지역의 새로운 농업관리체제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신원 검증 절차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앞에서 제기한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 내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통합 초기에는 남한의 연관기관에서 북한의 관련기관에 직원파견을 할 수 밖에 없다.

1 통일독일에서는 협동농장이 해체된 이후 1998년까지 전체 농업경영체 수의 81%가 가족농일 만큼 가족농 창업은 지배적이었음. 그러나 30년 이상 지속된 집단적 농업경영의 영향으로 2001년에도 개인농이나 협업농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 경영체인 협동조합,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전체 농경지의 50% 이상을 차지함.

2 보조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 지지한계(support threshold), 또는 개인농업의 진흥(promotion of individual farming)과 같은 개념에 대해 모르고 있었음.

결론

본 연구는 남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을 살펴보고, 두 조직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남북한 경제통합을 가정한 급격한 경제체제 변혁 과정에서 남북한 농업 부문의 농업관리조직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향후 이 문제는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독일 통일을 고려해 보면, 통일 이후 통합 과정에서 사회주의 농업관리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농업생산에서의 저생산성으로 인해서 북한지역의 농업 부문이 새로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식량부족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미 심각한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한지역은 통일 직후 최악의 식량난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통일 이후 이러한 식량난으로 인해 발생할 북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일 직후 북한의 농업생산을 빨리 정상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농업관리체제의 구축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일 이전에 효율적인 농업관리체제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농업 관련 조직을 비교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수행하는 역할과 임무에서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농촌지역 및 농업 부문의 지속적인 발전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는 남한의 농업관리조직과는 달리, 북한의 농업관리조직은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못하고 모든 농업행정이 정치적인 목적을 우선시 하는 비효율적인 구조이다.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 문제도 결국 농업 행정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농업 부문의 관리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통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농촌진흥청이 통일 이후 북한지역까지 농업관리사업을 확대해서 담당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의 농업과학원을 농촌진흥청 소속 연구소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북한지역에 한국농수산대학교 분교를 설치하여 북한지역에서 필요한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북한의 도농촌경리위원회는 농업기술원으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는 농업기술센터로 전환하여 지역의 농업관리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북한 직원의 전문경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직원의 사회주의 시절 개인기록에 대한 효율적인 신원 검증 절차를 미리 구축해 놓아야 한다. 그리고 북한 직원의 전문경력 및 개인기록 문제들로 인해 단기간 내 필요한 인력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통합 초기에는 남한의 연관기관에서 북한의 관련 기관에 직원파견을 할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고일동. 1998.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사례분석 : 구동독의 체제전환. 한국개발연구원.
- 권영경. 2004. 5. 북한경제의 현황과 개혁 · 개방 전망. 북한 이해. 통일부.
- 권태진. 2004. 북한 농업의 발전 방안. 북한의 농업·농촌 진흥 방안 세미나 자료. 북한농업연구원.
- 권태진, 김영훈, 지인배. 2007. 남북한 농업개발 협력 추진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경량 외. 1996. 남북한 체제통합에 대비한 농수산물 유통 정책의 기초연구. 강원대학교. 농촌개발연구소.
- 김경량 외. 1998. 통일에 따른 독일 농업의 재편과 전망. 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5권 제1호.
- 김계환. 2008. 독일 통일과 산업구조조정 : 남북산업협력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 김규철. 2021. 북한의 식량가격 결정요인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 김운근. 2000. 북한의 농업기반 실태와 농업개발 협력 방안. 농촌경제 제23권 제2호.
- 배진영. 1992. 통독 1년의 경제적 평가와 전망.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정책연구 92-03.
- 양철운. 2009. 북한 시장의 변화와 최근 동향. KPI 칼럼.
- 이일영. 2004. 북한 농업개혁의 현황과 전망. 통일교육원.
- 이은용 외. 1997. 남북한 농업기술연구·지도체제의 통합과 발전방향에 관한연구. 농촌진흥청.
- 전창근, 김운근. 1998. 북한의 농산물 유통실태와 통일 이후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방향. 농촌경제 제21권 제1호.
- 조명철 외. 2002. 북한의 농업 부문과 연관 부문의 연계시스템 운영실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선농업 과학원. 199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농업과학원.
- 주영희 외. 1996. 통독과정의 농업연구·지도체제 통합. 국제농업개발학회지 8(2).
- 최수영. 2002. 북한 농업의 개발전략과 남북한 농업 협력. 통일연구원.
- 통일부. 1999. 북한개요 2000.
- USDA Economic Research Service. 2022. 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2022-32.
- FAO/WFP. 2019.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 -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